

북한이 간과한 연평도 도발의 영향

조 한 범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0-45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남한의 육상영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포격이라는 점에서 연평도 도발은 과거와 다른 위중한 사태로 볼 수 있다. 치밀한 사전준비에 의한 기획도발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볼 수도 없다. 그동안 북한은 1, 2차 서해교전과 천안함 공격, 그리고 이번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력도발을 지속해왔다. 이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평도 포격도발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계점에 이른 경제상황과 북핵협상의 장기화,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남한의 정부의 태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초조감은 가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비해서 정치적 경험과 권력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하고 ‘밋밋한’ 김정은의 등장에 따라 권력세습의 정당화를 위한 다양한 자극적인 계기들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보다 자극적인 새로운 도발을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체제내부의 결속과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남한사회의 충격과 국제적인 이슈화 등 연평도 도발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 북한은 나름대로 의도했던 바의 상당부분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평도 도발의 영향은 이 같은 북한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안함 피격침몰 사건은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상하이엑스포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바로 앞바다에 해당하는 서해에서 발생했다. 연평도 도발 역시 중국이 새로운 이미지 쇄신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진행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북한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북영향력 한계와 아울러 북한이 중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중국을 대내외적으로 난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지도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군사적 완충지이자 전략적 거점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핵보유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행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친중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북한지도부를 교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내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정치적 저항세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정권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건재한 상황에서 중국이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로의 후계체제 승계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거나 북한내 급변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중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연평도 도발은 이 같은 중국의 고민을 좀 더 현실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고비용구조인 현 북한권력구조의 교체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연평도 도발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내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승리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린다고 해도 이번 도발은 이완된 북한사회의 결속이나 체제에 대한 신뢰의 회복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연평도 교전과정에서 발생한 북측피해 및 북한군 탈주와 처벌 등에 대한 소문이 북한에 퍼지고 있다는 보도와 같이 북한체제의 내구력이 한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외적 위기는 체제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아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취약한 구조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냉소와 회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연평도 도발이 김정은 후계구조 정착을 위한 무모한 시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내적 정치위기의 해소를 위해 포클랜드제도에서 영국과 제한전을 시도했던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결국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는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김정은 후계체제와 북한군부와의 관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김정은이 후계체제 정당화를 위해 군부를 동원해 강경한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김정은의 군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진행된 남북관계 유화 국면에서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한 북한군부가 다양한 기획안을 김정은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천안함 피격침몰과 이번 연평도 도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김정은에 대한 북한군부의 영향력을 증명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군부는 선군정치라는 개념이 상징하듯 내구력이 한계점에 이른 북한체제 유지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체제 붕괴과정에서 군부의 지지철회가 그 계기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군부가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군부는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 있어 조력자이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수 있다.

넷째, 연평도도발에 대한 남한사회의 영향이 북한의 의도와 상당부분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이 의도했던 무력도발을 통한 남한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 2차 서해교전과 천안함 피격침몰사태, 그리고 연평도 도발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어온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한사회의 내성을 강화해온 측면이 있다. 역설적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양보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리 정부로서도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외에 달리 선택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모전단이 투입된 이번 한미 서해훈련은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북핵위기 심화와 재래식 무력도발로 대미·대남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전형적인 협상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도발이 한계에 봉착한 북한체제의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일시적이라 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한 도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결코 북한체제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체제말기적 현상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